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02
----------	------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기술직렬’의 ‘과학기술직렬’로의 명칭 변경(안 제27조제2항제8호, 제3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제39조의2제2항)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

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다.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안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 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마.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1호 신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

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 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9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기술직렬 5급”을 “과학기술직렬 5급”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기술직렬 6급”을 “과학기술직렬 6급”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1조제1호 본문 중 “제31조 각 호의”를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를」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제31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 13. (생략)

③ 삭제

④ ~ ⑥ (생략)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

-----.

1. ~ 7. (현행과 같음)

8. -----

----- 과학기술직렬 -----

9. ~ 1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

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 ⑤ (생략)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3.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 <후단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결격사유)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p>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p>
<p>7.·8. (생략)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략)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p>	<p>7.·8. (현행과 같음)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p>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략)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은 해당 시·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임용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 의장은 각각 상

--.

1. (현행과 같음)

2. ----- 과학
기술직렬 5급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 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 (생략)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 과학기

술직렬 6급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현행과 같음)

2. -----

----- 과학

기술직렬 5급 -----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략)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④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

<신 설>

⑤ (생 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

-----.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
-----.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제63조(휴직) ①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

[illegible]

2.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p>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만 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p> <p>5. ~ 7.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8세</u> -----</p> <p>-----</p> <p>-----</p> <p>-----</p> <p>-----</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3조(징계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u></p>
--	---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5조(임용의 기준)	○ 다자녀양육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1항 후단	○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3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항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25조(임용의 기준)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1항 후단	
3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항	

2. 상세 사유

○ 제25조(임용의 기준)

-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 실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인사관리상 우대조치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1항 후단

- 자치단체별 채용 형태는 자치단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내부 인사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형사기소 또는 중대비위로 조사·수사를 받아 직위해제 받은 인원, 직위해제 기간의 장기화 여부,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Ⅲ. 부대의견

○ 해당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	오연순	하인호	여중협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오연순	044-205-3342	ys2631@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